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03 26 ()

 연합뉴스

'인파 운집' 봄축제 시즌 시작..."안전사고 예방 대책 필수"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박기영(춘천3.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장은 봄철 인파가 운집하는 지역축제와 체육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26일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이 재난안전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5월 지역축제는 25건으로, 1~3월(10건)의 2배가 넘는다.

박 위원장은 "인파 규모와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축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군 단위에서 경찰,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919건 중 중 봄철(3~5월)에 534건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onanys@yna.co.kr

일 간 투 데 이

2024 03 27 ()

14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박기영 의원 봄철 지역축제 등 인파사고 및 산불 예방 선제적 대책 촉구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봄철 개화시기를 맞아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각종 행사와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을 함께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이른 개화기를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 나들이, 상춘객 증가 등 각종 축제와 행사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봄철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당부했다.

최근 정부(행안부)는 지난 13일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봄철 지역

축제 특별대책 기간’을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 연구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100년 사이 매화는 약 53일, 개나리 약 23일, 벚꽃은 약 21일 개화 시기가 당겨진 것으로 분석했고, 교육부는 2024년 2월 ‘고등교육법’을 개정, 대학 축제 등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축제 인파 규모와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축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는지 점검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춘천 조교리 주민·한기호 의원 등, 북산면 교량 건설 도지사 면담



▲ 춘천 조교리 주민들이 26일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와 면담을 갖고 춘천 조교리~북산면 주민센터 내 교량 건설을 요청했다.

춘천 조교리 주민들이 26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김진태 지사와 면담을 갖고 춘천 북산면 조교리~북산면 주민센터 내 교량 건설을 요청했다.

이범석 춘천 조교리 이장 등과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울 국회의원, 박찬홍·양숙희 도의원, 박제철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면담에선 물로리·조교리가 1972년 소양댐 건설 이후 춘천행 직통도로가 단절돼 홍천군 두촌면으로 우회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적됐고 교량건설 등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 03 27 ()

21



◇김용복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고성·사진 왼쪽), 이
지영도의원(비례)은 27일 오
후 2시 고성군 간성을 간성
로 40(신청사 5층)에서 열리
는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3 27 ()

17



김용복(고성·왼쪽)·
이지영 도의원은 27일
오후 2시 고성군산림
조합에서 열리는 신청
사 개청식에 참석한
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7 ()

05

다가오는 인구 위기 2050년 도민 150만명 선 붕괴

청년층 유출·고령화 등 심화
출생 감소 경제활동 인구 급감
2050년 148만2000명 전망
도, 외국인 정착 지원 등 대비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2050년에는 도민 150만명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공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인구는 152만500명으로, 전년(152만6000명)대비 5500명이 감소했다.

향후 도내 인구는 귀농, 귀촌 등으로 2035년까지 153만7000명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젊은 청년층 유출과 수도권과의 인구격차, 인구고령화 등이 심화되면서 2050년에는 148만2000명 수준까지 떨어져 150만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기준 경기

(1379만5000명), 서울(933만8000명) 등의 순으로 인구가 많았으며 수도권 인구는 2609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50년에도 경기를 포함 세종, 제주, 충남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돼 도내 경제활동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10년 전인 2013년(1만980명)과 비교해 4280명(39.0%)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6년(1만58명)까지 1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 8958명, 2020년 7835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포함계출산율도 지난 2021년(0.979명) 처음으로 1명대가 붕괴됐고, 지난해 0.89명에 그쳤다.

강원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

소지역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은 18.2%로 집계됐으나 오는 2072년에는 47.7%, 절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총인구도 지난해 5171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 들 것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27 ()

06

'탈강원' 꿈꾸는 교사 매년 400명대...올해 30명 떠났다

전출성공 7% 불과 4년내 최저
수도권 출신 교사 증가도 원인
도교육청 "복지 향상 정착 지원"

연간 400여 명에 달하는 강원교사가 '탈 강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교사는 30명으로 집계됐다.

26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3월 1일자로 강원도를 떠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강원도내 교사는 30명이다. 전출을 희망한 인원은 427명이다. 중등(교과교사)이 280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고, 초등 72명, 유치원 17명 순이었다. 보건·전문상담 등에서도 타 시·도 전출 신청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전출에 성공한 비율은 7.03%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비율이며, 전출된 숫자 역시 가장 적다.

매년 많은 수의 강원교사가 탈 강원을 기대하며 전출 의사를 밝히나 타지역에서 강원도로 전입하려는 인구는

이보다 많지 않으면서 전출 확률은 희박하다. 지역 간 교사 이동은 1대 1 교환으로 진행,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을 희망해야 가능하다.

'탈 강원'을 원하는 강원도내 교사는 매년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441명이 전출을 희망해 40명(9.07%)이 강원도를 떠났다. 2022년에는 희망자 438명 가운데 50명(11.42%)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다. 지난해 역시 455명이 전출을 희망했고, 이 중 44명(9.67%)이 근무지역

을 옮겼다.

강원도를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가 증가하는 것은 지역 외 출신 비중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기준 강원도내 전체 중등(공립) 교사 5999명 가운데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강원도내 대학을 나온 비율은 39.9%(2399명)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발한 초등신규교원(장애 포함) 359명 가운데 춘천교대 출신은 62.1%(223명)로 확인됐다.

춘천의 한 초교 교장은 "수도권 출신들이 강원지역 대학을 왔다가 임용까지 성공하고, 이후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출신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교직원 관사를 비롯해 교사 복지를 꾸준히 높여 다른 지역 출신 교사들도 도내 지역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애쓰고 있다"고 했다. 정민엽



‘강원특별법’ 3차개정 교육분야 특례 강원교육자치추진단 협의회 회의가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회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도교육청, 강특법 3차 개정 교육특례 ‘옥석 선별’ 집중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논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반영될 교육분야 특례 11건을 준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례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1개 특례 모두 중요하나 당장 입법 가능성이 있는 특례와 추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도교육청

은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 9월 결성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은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와 ‘보통교부금 특례’ 2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수 추이를 보며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원 운영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 관리방식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며, ‘보통교부금 특례’는 현재 정부가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정부 매입임대주택도 ‘강원 소외론’

전국 4424호 모집 중 0.8% 배정
도내 청년·신혼부부 선택권 부족
작년 임대주택 매입 달성률 0%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강원지역은 소규모에 그치면서 수도권 대비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 규모이지만 강원도는 35호(0.8%)에 그쳐 제주(11호), 전남(28호) 다음으로 적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반면 서울(732호), 경기(633호), 인천(1108호) 등 수도권은 2473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에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에 30~40% 수준의 I 유형과 시세에 70~80% 수준인 II 유형이 공급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

로 모집해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변경했다.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복지 정책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또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호에 달한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1개 단지, 397호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7032호)와 비교하면 6635호(94.4%)나 차이가 났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기에 수요가 있으나 강원도민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저조하다. 지난해 강원지역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는 351호였으나 달성률은 0%로 확인됐다. 강원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우진

2024 03 27 ()

09

강원도민일보

도청 신청사 부지 토지보상 5월 본격화

춘천 고은리·신촌리 278필지
감정평가 거쳐 주민협의 예정
현 청사 활용 방안 총선 쟁점

춘천시 동내면에 들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토지 감정평가가 5월 시작, 토지 보상작업이 본격화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보상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보상은 고은리 373번지 일원 공공청사와 진입도로 등 13만 8000㎡, 고은리와 신촌리 278필지가 대상이다. 도는 5월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6월 보상액 산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는 7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액은 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 등 모두 2명



이 참여한다.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 조성 작업도 시작된다. 도는 사암리 일원에 위치한 도유지에 이주자 택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는 25가구 규모로 도는 연말까지 부지 조성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자 택지로 옮기는 주민 규모는 보상액 산정 결과가 나와야 구체화 될 전망이다.

도청 신청사 보상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총선과 맞물려 도청사이전과 현 청사 활용 방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춘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대표발의했던 역사문화 정비법과 연계해 신사 등 일제 잔재를 정리하고 춘천 관아와 이궁을 복원해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봉의산 명품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해란 후보는 도청사이전에 따른 명동 일대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청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춘천 분원을 유치하고 육림고개와 중앙로 등 원도심을 미식·라이프·문화복합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조일현 후보는 "도청사가 고은리로 옮겨가면 현 도청사 주변지역은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 청사와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도청사를 새로 짓는 일 만큼 치밀하게 고

민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오정규 후보는 "도청사를 고은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급하게 추진된 만큼 다시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춘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는 춘천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복합타운을 만들고 국제학교를 유치,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는 "강북에 도유지(옛 농업기술원 부지)를 놔두고 사유지에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춘천역 설치와 의료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무소속 이호범 후보는 도청사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옛 농업기술원 부지로 도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

江原日報

2024 03 27 ()

04

글로벌 10위 기업과 파트너십... 자신감 붙는 강원 반도체 산업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강원 연고 기업이자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0위인 DB하이텍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강원형 반도체 산업' 육성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6일 DB하이텍과의 반도체 산업 육성 협약식에서 미래 반도체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업 여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강원 연고의 DB하이텍이 대규모 캠퍼스(반도체 생산시설)를 경기와 충북에 갖고 있는 것은 당시에 강원도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그 '아무 것'을 만

강원도-원주시-DB하이텍 업무협약

김 지사 "DB하이텍 확장 필요한 시점에 산업기반 충분할 것"
원강수 시장 "향후 전문 인력 양성 가능한 원주 투자 고려해달라"

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반도체 교육센터라는 공공 인력 양성 시스템을 도입

한 후 미래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B하이텍이 점차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증설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

후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한 원주 투자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DB하이텍도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원강수 원주시장이 26일 충북 음성 DB하이텍 상무캠퍼스에서 반도체산업 협력 협약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음성=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4 03 27 ()

04

“강원형 국제학교 지역학생 할당 등 차별화”

도교육청, 특별법 3차 개정 교육 입법과제 논의 위한 협의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되는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학생 선발을 늘리고 K-문화콘텐츠학과 개설 등 지역화·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26일 도교육청 2층 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강원 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강원교육자치추진단은 국제학교 설립 특례의 개선방안으로 ‘강원형 국제학교’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능력을 강조하는 선발기준을 마련해 ‘귀족학교’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입학의 지원과 지역학생 할당제 도입 등 입학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AI 등 직업계고 관련 학과 및 K-문화콘텐츠학

과 등을 제시해 타 지역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입법 가능성이 높은 특례와 중장기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교부금 특례의 경우, 올해 세수 감소로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장기과제로 분류했다. 특히 도청과의 워킹그룹회의에서 배제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은 제주·세종·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입법 대응하거나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한다.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11개 특례가 모두 중요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

강원도민일보

2024 03 27 ()

10

원주 평장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도, 8만여㎡ 내달 지정 고시
주민 불편·대기질 개선 기대

속보=축산단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원주 소초면 평장리 일원 8만여㎡ 지역이 오는 4월 악취관리지역(본지 2023년 12월 14일자 4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내 두 번째 돈사 악취로 인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소초면 평장리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돈사 등 대단위 축산단지가 위치, 극심한 악취로 심각한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총 27개 필지, 8만 3712㎡에 달한다. 악취배출시설이 영농조합법인, 축산, 농장, 비료공장 등을 포함해 52곳 위치해 있다.

도가 지난해 평장리 일원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

출구별 복합악취가 기준치 대비 최대 200배 초과, 부지경계지역 복합악취가 기준치 대비 최대 6.6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역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오는 4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견 수렴 후,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 소초면 평장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관리 대상 사업장은 지정고시 6개월

이내 원주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되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원주시가 6개월 단위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해당지역 악취를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악취로 겪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대기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영

2024 03 27 ()

13

강원도민일보

태백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첫 삽

102억원 투입 연말 준공 목표
스카이워크 등 편의시설 설치
도심 관광자원 거점역할 기대

태백 도심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높이 43m 규모의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가 첫 삽을 떴다.

시는 26일 황지동 제7공영주차장에서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은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02억원이 투입되는 힐링시티타워는 높이 43m의 타워, 문화예술회관과 제7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폭 3.5m, 연장 80m의 연결보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기공식이 26일 태백시 황지동 제7공영주차장에서 이상호 시장과 고재창 시장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로로 조성된다. 타워 내부 공간에는 볼거리 및 체험이 가능한 스카이워크, 하늘그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건물 20층 높이인 43m의 힐링시

티타워가 조성되면 전망대에서 도시전경과 웅장한 산,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동서남북 전경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등 황지연못(황지공원)과 문화예술회관(태백공원), 황지자유

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관광자원의 거점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태백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활용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가 해소되고, 주변 관광지 및 생활권에 대한 보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고재창 시장의장은 "평균 해발고도 900m의 태백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상호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힐링시티타워에서 태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 03 27 ()

16

“연천~철원 백마고지역 열차 운행 재개를”

이슈현장

철원군의회 촉구 건의문 전달
코레일 수도권 동부분부서 시위
“균형발전·성장동력 차원 필요”



철원군의회는 26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분부를 방문해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촉구했다.

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26일 백마고지역 관할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분부(서울 청량리역)를 방문해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철원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철원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연간 720만 명이 철원을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성장, 연천~백마고지역 구간

열차 운행 재개는 수도권과 철원·연천까지의 광역교통시설 간 원활한 이동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도 가능

하다”며 “철원군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위에 나선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철원군민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절감과 공정 단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제안한 소요산~백마고지역 여객열차 운행 일시 중지를 막대한 불편을 감내하며 받아 들였지만 지난해 12월 복선전철이 재개된 이후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까지의 운행 재개는 요원한 실정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재용

江原日報

2024 03 27 ()

/ 19

‘오대산 실록·의궤 선양회’ 출범에 거는 기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사고본(이하 왕조실록과 의궤)이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줬다. 귀향(歸鄕)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왕조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과 1922년 일제의 계략 속에 고향 땅을 떠났다. 실록은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치와 도쿄대 교수 시로토리(白鳥庫吉)의 결탁으로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 도쿄대로 보내지고, 의궤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에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탈로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실록의 상당수는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 가운데 일부인 27책은 1932년 경성제국

대로 옮겨져 돌아왔지만 나머지 실록과 의궤는 1965년 한일 문화재·문화협정을 거치면서 점차 잊혀진다.

1980년대 학계와 불교계에서 왕조실록·의궤 잔본의 실재(實在)를 일본에서 확인하면서 월정사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이 벌어져 2006년과 2011년에 왕조실록·의궤는 환국에 성공한다. 하지만 보관 장소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조치에 실록과 의궤를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2021년 월정사와 강원일보 등이 주축이 돼 범도민환수위를 출범시켜 다시 한번 문화재제자리찾기 운동을 펼치기에 이른다. 급기야 이듬해 국회가 결의한 의결로 힘을 보탰고, 월정사가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정부가 전시관 예산을 별도 편성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제 어렵게 왕조실록과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지역 발전과 연계돼야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마침 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28일 월정사 경내 회의실에서 왕조실록·의궤 선양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 선양회가 환수위의 성과와 노하우를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선양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대

규모 거버넌스를 구축, 여러 분야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해 나간다고 하니 향후 활동에 기대가 크다.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하는

28일 월정사 경내 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들, 실질적 역할 분담을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발전과 연계돼야

것은 당연하다. 선양회의 출범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이름만 내놓는 싱거운 조직이 돼선 결코 안 된다.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전문가로서의 소명감으로 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더욱이 왕조실록과 의궤의 귀향을 기념하는 연례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니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 특유의 장점을 잘 살려내야 한다. 왕조실록과 의궤 관련 관광상품도 자치단체와 협의해 개발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왕조실록과 의궤의 귀향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실천력이 담보된 치밀한 구상이 더없이 중요하다.

江原日報

2024 03 27 ()

/ 19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지금은 환자 지켜야 할 때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도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동참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가 확정된 2,000명 의대 증원과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과 배정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로 확정된 2,000명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는 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듯했으나 의사들이 결국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로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은 환자들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은 사직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교수들의 주 52시간 근무에 이어 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가 최소화될 경우 적잖은 의료 차질이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면허정지로 전공의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사직서로 환자들을 볼모 삼아 더 큰 협박을 하고 있다

는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를 늘리면 왜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증원 철회만을 강변해선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의료계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비뚤어진 사고에 갇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만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반발로 27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정원을 351명 줄여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의대 정원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뒤 책임질 사안이지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증원이 확정된 의대들은 5월 입시요강 발표에 맞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교육부도 정원 확대 의대들을 대상으로 시설과 교수인력 등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한발 양보해야 이 같은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지금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돼 앞으로의 의료개혁 세부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